

우크라·러, 전쟁 3년만 첫 미 중재 직접협상…휴전 분수령

푸틴 ‘시간별기’ 3자 회담 확대
푸틴 참석 가능성 크지 않을 듯
우크라·러 시각차 해결도 과제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약 3년 만에 직접 마주 앉아 휴전을 논의한다.

서방의 대러시아 제재 압박에서 촉발된 이번 회담은 순식간에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등 양국 정상회담 가능성으로 덩치가 커졌다.

여기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회담에 참여할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이번 회담이 전쟁의 향방을 가를 분수령으로 주목받고 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양국의 대표단은 15일(현지시간) 튀르키예 이스탄불에서 평화협상을 벌인다. 두 나라가 직접 협상장에 마주한 것은 2022년 6월 이후 처음이다.

특히 이번 협상에는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 스티브 위트코프, 키스 켈로그 특사 등이 협상 중재자인 미국 측 대표단으로 합류한다.

이번 평화협상의 발단은 11일 푸틴 대통령의 제안이었다. 그 전날 영국, 프랑스, 독일, 폴란드 등 유럽 4개국이 추가 제재 가능성으로 ‘30일 휴전’을 압박하자, 협상을 역제안해 시간을 벌어 보려는 의도가 엿보였다.

그러나 이 제안에 젤렌스키 대통령이 다시 정상회담 역제안으로 되받아치면서 판이 커졌다. 이렇다 할 반응이 없자 젤렌스키 대통령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참석까지 요청하고 나섰다.

트럼프 대통령도 협상장에 직접 등판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특히 중동 순방 중인 트럼프 대통령이 거리상 멀지 않은 튀르키예로 이동할 가능성을 직접 시사하기도 했다.

최근 우크라이나 쪽으로 미묘하게 우호적인 언행을 보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참석한다면 푸틴 대통령에게는 상당한 압박이 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톱다운식 답판 성향이나 쇼맨십 등이 예상 못 한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번 회담의 도화선이 됐던 유럽 4개국의 제재 압박 때도, 트럼프 대통령은 휴전을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 러시아, 우크라이나 어느 쪽이든 제재를 가할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휴전 제안을 거부한 러시아 입장에서는 추가 제재를 걱정해야 하는 처지다.

푸틴 대통령은 정상회담 가능성에 대해 여전히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지만, 젤렌스키 대통령은 전방위로 푸틴 대통령의 참석을 압박하고 있다.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젤렌스키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취재진에게 “회담이 실제 열릴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다 하겠다”며 “지도자(정상)급 논의에서 우리는 휴전 합의를 위해 모든 것을 하겠다. 내가 휴전을 합의한다면 그 대상은 바로 푸틴이다. 오로지 푸틴만 그 결정을 할 수 있다”고 했다.

가디언 등 일부 매체와 가진 인터뷰에서는 “푸틴이 (이스탄불에) 도착은 하지 않고 장난이나 친다면, 바로 그 순간 그가 전쟁을 끝내고 싶어하지 않는다는 것이 확인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푸틴 대통령이 참석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푸틴 대통령은 그동안 우크라이나의 지도자로서 젤렌스키 대통령의 정통성을 인정하지 않았는데, 정상회담에 참석하면 그를 정식 협상 파트너로 인정한다는 의미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결국 트럼프 대통령의 참석 여부가 3자 정상회담의 성사를 가를 중대 변수가 될 전망이다.

푸틴 대통령에게 우호적인 한 정치 분석가는 WP에 “푸틴과 젤렌스키의 대면 회담이 열릴 가능성은 크지 않다”며 “푸틴이 이스탄불에 올지는 트럼프에 달렸다. 또한 트럼프가 젤렌스키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저줄지에 달렸다”고 말했다.

실제 크렘린궁은 이번 회담 참석자를 묻는 취재진 질의에 “대통령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밝히겠다”며 답변을 미뤘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동 순방 일정을 변경하는지 등을 판단하기 위해 답변을 미룬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푸틴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의 회담 참석 여부를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회담이 모두 성사된다 해도 양국의 의견차가 단순히 좁혀질지는 미지수다.

푸틴 대통령은 3년 전 중단됐던 회담 당시의 요구사항을 우크라이나에 들이밀 가능성이 크다. 러시아의 당시 요구안은 사실상 우크라이나의 항복으로 해석돼 우크라이나가 그대로 받아들일 가능성은 없다. WP는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해체’라는 궁극적인 목표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는 서방 당국자들의 의견을 전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연합뉴스

중, 대미 관세 10%로 조정…“비관세 보복도 곧 취소”

미국은 소액소포 관세율 인하하기로

중국이 미국과의 ‘관세 전쟁’ 휴전 합의에 따라 미국산 수입품에 대한 추가 관세율 125%를 10%로 조정할 조치를 14일 시행하기 시작했다.

중국은 이날 낮 12시 1분(중국시간·미국 동부시간 14일 0시 1분)을 기해 종전 대미 추가 관세율 125% 중 91%포인트의 적용을 정지했고, 남은 34% 가운데 24%포인트는 90일 동안 시행을 잠정 중단하기로 했다.

이는 미중 양국이 지난 12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내놓은 관세 인하 합의에 따른 조치다.

공동성명에 따르면 양국은 각자 수입품을 겨냥한 추가 관세율 중 91%포인트를 취소하고 24%포인트는 90일 유예하기로 했다.

이로써 중국의 대미 추가 관세율은 10%로 낮아졌다. 미국은 올해 2월과 3월 각각 10%씩 부과한 합성마약 펜타닐 관련 관세 20%를 남겨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적용되는 대중 추가 관세율은 30%가 됐다.

양국은 공동성명 관련 조치를 14일까지 하기로 했다. 아울러 협의 체계를 통해 후속 협상을 이어가는 것에도 합의했다.

미국 백악관은 전반적인 중국산 수입품 관세 인하 외에도 이날부터 중국발 800달러(약 114

만원) 미만 소액 소포에 부과하는 관세율을 120%에서 54%로 낮추는 조치도 내놔다.

중국 관세세칙위원회는 전날 관세 인하 공고에서 “중미가 쌍방 관세 수준을 대폭 낮추는 것은 양국의 생산자·소비자 기대에 부합하는 것이자 중미 양국의 경제 교류와 세계 경제에 이로운 것”이라고 했다.

중국은 미국에 대한 각종 비관세 보복 조치도 철폐하기로 했다.

중국중앙TV(CCTV)는 “4월 2일 이후 미국의 관세 인상에 대한 다른 비관세 반격 조치는 중국 관련 부문이 조만간 상응해서 중단·취소할 것”이라고 전했다.

연합뉴스

“러 미사일에 한미일 부품 수두룩…제재 우회 입수”

영국 언론 “한국산 증폭기도”

러시아가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사용한 신형 미사일에 한국·미국·일본 등 서방 부품이 사용된 것으로 드러났다고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가 1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국방부 정보총국(HUR)은 지난 2월부터 오데사, 미콜라이우 등 남부 전선에서 큰 피해를 준 러시아의 신형 미사일을 식별했다.

작은 구러미라는 뜻의 ‘S8000 반데룰’이라고 명명된 이 비행체는 115kg의 고폭 탄두를 탑재하고 시속 400마일(약 643km)의 속도로 약 482km 넘게 날아가는 경량 공대지 순항 미사일이다.

대형 드론에서 발사되기 때문에 전술 항공기를 위협에 노출하지 않은 채 깊숙이 공격할 수 있고, 비용이 적게 들어 대량 생산이 가능한 것이 장점이다.

기존의 러시아 미사일보다 급격한 선회 비행이 가능하며 추적 회피 기능과 상대 전파방해 방지 시스템 등을 갖추고 있다고 한다.

또 다른 특징은 여러 나라의 부품이 조합된



지난 9일 러시아 전승절에 모스크바 붉은 광장을 지나가는 미사일.

연합뉴스

‘프랑켄슈타인 미사일’이라는 점이다.

예를 들어 제트엔진은 중국 기업 스위윈이 제작했다. 이 엔진은 알리바바 등 온라인에서 1만 2천 파운드(약 2,200만원)에 판매되고 있다.

그런데 이 미사일의 핵심 부품 중에는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고 러시아에 대한 제재에 동참해온 서방 기업 30곳의 제품도 다수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산 동작 추적 장비, 스위스산 마이크로컨

트롤러, 호주산 정보교환 모델, 일본산 배터리 팩 등이다. 이 가운데는 한국에서 만들어진 서보드라이브(자동제어장치를 위한 전력 증폭기)도 포함됐다.

이는 서방의 대러시아 제재에 큰 구멍이 나 있음을 보여주며 러시아는 이를 이용해 중국, 튀르키예, UAE, 옛 소비에트연방 국가 등 제3국 우회로를 거쳐 부품을 제공받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텔레그래프는 진단했다.

연합뉴스



방곡 빌딩 붕괴 현장에서 희생자 추모하는 구조대원들.

연합뉴스

‘강진 붕괴’ 태국 빌딩 수색 종료…시신 89구 수습

3월 미얀마 강진으로 인한 태국 빌딩 붕괴 현장에서 50일 가까이 이어진 수색 작업이 종료됐다.

14일 현지 매체 방콕포스트와 AP통신에 따르면 태국 당국은 지진 여파로 공사 중 무너진 감사원 신청사 건물에 대한 수색 작업을 공식적으로 종료한다고 전날 밝혔다.

사고 현장에서는 시신 89구가 수습됐고, 7명은 실종 상태로 남겨졌다.

그동안 구조·수색 작업은 구조대원 수백명과 중장비가 투입돼 24시간 계속됐다.

경찰은 희생자 중 86명의 신원을 확인했고,

나머지 사망자에 대한 신원 확인 작업을 진행 중이다.

찾ாத 싯타판 방곡시장은 “도움을 준 모든 분에게 감사드린다”며 “많은 사람의 인생을 바꾸고 큰 교훈을 남긴 사건이었다”고 말했다.

미얀마에서 규모 7.7 강진이 발생한 지난 3월 28일 방콕 짜뚜짝 시장 인근에서 공사 중인 30층 높이 건물이 무너지면서 노동자들이 잔해에 매몰됐다.

당시 방콕에서도 큰 진동이 감지되고 고층 빌딩 다수가 피해를 봤지만, 완전히 무너진 건물은 감사원 신청사가 유일하다.

연합뉴스

판자보주 경찰청장 가우라브 야다브는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불법 주류 유통 조직의 총책을 포함한 9명을 체포했다며 “온라인으로 사들인 메탄올이 가짜 술을 만드는 데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인도에서는 농촌이나 소독이 낮은 도시를 중심으로 값싼 술을 찾는 수요가 많아 주민들이 불법으로 만든 가짜 술을 마신 뒤 숨지는 사건이 자주 발생한다.

연합뉴스